

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25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1. 10. .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안전 예산 사업별 예산요구 세부내역 검토 및 투자우선순위 사전심의를 위해 내부직원으로 구성된 ‘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’를 설치·운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6조의2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6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
7. 입법예고 결과

가. 예고기간 : 2021. 9. 13. ~ 2021. 10. 4. [21일간]

나. 의견내용 : 의견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 : 해당없음

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의견없음

9.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 : 경기도 안전기획과

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) 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(이하 “안전예산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사전 조정

2.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관계부서 간 협조사항 처리 등

② 안전예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안전예산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 실·국·소장이 되며, 위원은 하남시 소속 부서장 중 부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④ 안전예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안전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가 이를 겸직한다.

⑥ 그 밖에 안전예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안전정책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 · 성명	안전정책과 박 종 현
	팀장 직위 · 성명	안전기획팀장 박 상 규
	담당자 성명 · 전화번호	김 효 진 (790-5508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 설>	<p>제6조의2(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) 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(이하 “안전예산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사전 조정 2.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관계부서 간 협조사항 처리 등 <p>② 안전예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안전예산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 실·국·소장이 되며, 위원은 하남시 소속 부서장 중 부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</p> <p>④ 안전예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⑤ 안전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가 이를 겸직한다.</p> <p>⑥ 그 밖에 안전예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</p>

관계법령 발췌서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약칭 : 재난안전법)

[시행 2021. 6. 23] [법률 제17698호, 2020. 12. 22, 일부개정]

제10조의4(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지방재정법」 제36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,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, 제11조에 따른 시·도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시·군·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
2. 재난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구축 및 기능 강화
3. 재난취약 지역·시설 등의 위험요소 제거 및 기능 회복
4. 재난안전 관련 교육·훈련 및 홍보

5.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업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이 승인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결산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0. 6. 9.]

부칙 <제17698호, 2020. 12. 22.>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